

충남리포트 제216호

ChungNam Report

2016. 4. 6.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안 연 환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세법센터 연구위원, ahntax@hanmail.net
정 창 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jcs619@hanmail.net
홍 일 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iphong1732@gmail.com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재정, 세제, 세정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CONTENTS

〈요약〉

1.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2. 충남 재정·세제·세정 현황과 특징
3. 충남 지방재정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4. 정책제언

요약

-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세제, 세정 측면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충청남도 현실에 부합하는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재정·세제·세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세입기반, 효과적 세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추가적 재정확보 방안 마련 절실
 - 충남 북부권의 인구 및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역외유출과 부동산 관련 세수에 편중된 세입구조 문제
 - 과도한 시·군세 체납액, 자동차세 등 주민마찰이 심한 세목의 체납 심각, 적극적 체납징수체계 부족
- 지방재정 발전방안 핵심은 세외수입 증대임.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개혁과 운영 효율화, 자금관리방식 개선 필요
- 에너지 저장·정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충남도민 중심 납세지원단 창설, 시·군세 체납액 공동대책팀 구성, 고액 체납자 체납징수전담반 구성 등 우선 시행 가능한 조치 실천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

01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한국 경제는 중앙정부의 세입을 크게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지방세 수입과 연동되는 기어효과(gear effect)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세수입 증대노력 여전히 소홀.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이 더욱 압박받고 있는 상황
-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세제·세정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충남형 재정 확충방안 모델’ 개발이 필요
 - 재정 측면: 지방재정의 위기는 전체 재정구조의 문제점에서 주로 기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 정책시행이 어려움. ‘1만불 시대’에 만들어진 현재의 재정구조를 ‘3만불 시대’에 걸맞게 변화시켜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선 제로섬 게임 형태의 중앙 대 지방의 현행 지방 재정 구조를 넘어서는 전달과정 기준과 구조설계가 중요
 - 세제 측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정부 세입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원을 강화할 수 있는 탄력적 지방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 중장기적으로 지방세 수입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세정 측면: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통하여 징세비를 절감하고 충청남도 실정에 부합하는 충남형 체납징수모델 개발을 통해 체납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적극 도모해야 함

▶ 충청남도 재정 · 세제 · 세정의 현황과 특징

1) 충남 지방재정의 특징

- 안정된 세입기반과 효과적 세출관리, 그러나 추가적 재정보호방안 마련 절실
- 충남의 살림살이 규모는 전국 광역도 평균보다 낮고, 공유재산의 규모도 낮은 편임. 충남의 세입 총계는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약 5조 7453억 원(기금 포함)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2%.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세출 총계는 5조 2218억 원이며, 세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9%
 - 지방세 수입이 2013년 대비 2014년 회계연도에 29%이상 늘었고, 보조금도 소폭 증가
 - 세출규모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9.8%의 연평균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세출증가율은 꾸준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입증가는 경기영향에 따라 둔화되고, 진폭도 클 가능성이 높음

[표 1] 충청남도 연도별 세입 · 세출 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세입 금액	4,465,374	4,985,717	5,352,153	5,290,584	5,745,345	7.2%
세출 금액	4,230,922	4,578,833	5,006,898	4,964,933	5,221,869	5.9%

출처: 충청남도 2015년 지방재정공시(2014회계 결산 기준)

-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26.1%로 경기도와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도 중 가장 높음. 재정자주도는 2014년 40.75%로 다른 광역도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이나 경기도와 제주도의 재정자주도가 높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충남 지역의 낮은 자체수입과 보조금 등의 과도한 의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인구유입과 기업 입주로 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로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임
 - 재정자주도가 높게 나온 것은 자체수입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2012년 까지 꾸준히 증가한 결과
 - 2010년 이후 꾸준히 재정수지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결과, 적절한 수준의 흑자재정을 실현하고 있음
- 충남은 2014년 회계연도에 세입초과가 발생하면서 전체 채무액 관리의 일환으로 645억 원의 장기 차입금을 상환
 - 민자사업 재정부담과 보증채무가 없어 재정운영 부담은 덜하지만, 공기업 특별회계에 따른 채무액이 8천억 원을 넘어 관리가 필요한 상태
- 세출 증가요인만큼 세입이 뒷받침되면서 안정적 재정운영 가능. 특히 장기채무 상환에 우선하면서 재정건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도농복합지역의 한계로 인해 재정자립도 자체가 높지 않고, 1인당 채무액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비가 빠르게 늘어 재정부담 또한 커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 악재 속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은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음

2) 충남 지방세제의 현황과 특징

- 충남 북부권의 인구·세수 증가, 높은 역외유출, 부동산 관련 세수 편중
- 2014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기준으로 지방세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4.7%임. 이 중 도세가 1조 1,160억 원(49.6%), 시·군세가 1조 1,357억 원(50.4%)이었음

- 실제 징수된 도세 1조 515억 원 중 취득세가 5,590억 원으로 50%에 달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여부가 도세 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침
- 2014년 징수한 시세 9,816억 원 가운데 천안시가 3,298억 원, 아산시가 2,648억 원으로 전체 시세 수입의 60%를 두 기초단체가 차지해 충청남도내 지방자치단체 간 시세 수입 불균형 심각
- 시세와 달리 군단위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충남 지방세제의 현황을 볼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비과세·감면액 규모가 크다는 사실. 비과세·감면액이 도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가 도세수입 확충방안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음.

- 2013년 결산기준 충청남도 도세 1조 405억 원의 43.3%에 해당하는 4,512억 원이 비과세·감면. 도세 세목 중 취득세의 비과세·감면액이 4,458억 원으로 전체 도세 비과세·감면액의 98%를 차지

[표2] 충청남도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세목	비과세 감면액	비고
도세	취득세	440,651	
	등록면허세	5,208	
	지역자원시설세	5,393	
	도세 비과세·감면 계	451,253	
시·군세	자동차세	10,696	
	주민세	1,963	
	지방소득세	3,914	
	재산세	156,990	
	시·군세 비과세·감면 계	173,565	
총계	도세 +시·군세 = 계	624,818	

자료 : 2014년 지방세통계연감 자료 재정리

3) 충남 지방세정의 현황과 특징

- 과도한 시·군세 체납액, 주민마찰 심한 세목 체납 심각, 적극적 체납징수체계 부족
-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430~1,530억 원을 유지. 도세 체납액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시·군세 체납액은 2009년 882억 원에서 2014년 1,068억 원으로 크게 증가
 - 2015년 8월 기준 지방세 체납액 1,619억 원 중 시·군세 체납액이 1,237억원, 전체의 76.5%를 차지

[표 3] 충청남도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단위: 백만 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8.
합계	143,169	148,708	153,751	147,639	143,772	142,289	161,980
도세	54,888	53,247	50,276	39,770	36,527	35,409	38,266
시·군세	88,281	95,461	103,475	107,869	107,245	106,880	123,714

출처: 충청남도 세정과 내부자료

- 시·군세 체납액 규모는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크고, 도세는 지방교육세, 취득세 순
 - 2014년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44억 원, 지방교육세 체납액은 67억 원이며 건수로는 각각 137,655건과 309,701건에 달함
- 충남도청 세무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시·군세의 체납액이 과도하고, 시·군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순으로 체납액 규모가 크다는 것.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별도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
 - 부족재원을 지방교부세 방식으로 보전 받는 자치단체장은 주민들과 마찰이 큰 자동차세 등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세목의 체납액이 많은 가는 징수와 관련해 중요
 - 충청남도과 각 시·군은 체납세금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지자체 징수담당자에게 맡겨 놓고 있는 실정. 반면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설치해 체납징수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성남시는 최근 '체납실태 전수조사반'을 운영해 체납세금의 적극적 징수는 물론 맞춤형 납세안내, 복지혜택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음

03

▶ 충남 지방재정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

- 충청남도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크게 중앙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충청남도 스스로 실행할 과제로 구분할 수 있고¹⁾, 이는 다시 중·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 나눌 수 있음.
-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지방세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종합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은 충청남도의 실정에 맞는 ‘충남형’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1) 지방재정 발전방안

- 충청남도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방재정 발전방안의 핵심은 세외수입을 늘이는 것임.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 행정 관리방식의 지방공기업을 개혁하고 운영을 효율화해야 함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독립채산 경영이 유지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지방공기업의 광역행정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둘째, 현금보유를 최소화하고 자금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과적 확충을 도모
- 자금관리와 관련된 제반 행정활동의 형태를 법에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금융기관과의 효과적 관계, 자금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예산회계체계의 구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1)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자의 충남연구원 2015년도 전략과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정·세제·세정 발전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에 실려 있고, 본 글에서는 충청남도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함

- 전북 순창군은 민간보조사업 예산 관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이자수입 증대를 꾀한 결과, 2011년도의 경우 전해 이자수입 9백만 원보다 무려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한 바 있음

2) 지방세제 발전방안

- 첫째, 중앙정부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 지방세제 개선과제들로써 독일식 공동세²⁾ 도입, 일부 국세세목³⁾의 지방세 이양,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의 개편 등이 있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비과세·감면 신설시 협의와 세수보전대책 마련을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필요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과세자주권과 자치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은 아직 그럴 여건이 아님. 따라서 충청남도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지방세제 발전방안은 매우 제한적임
-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충청남도 역시 에너지 저장·정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건의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강원도는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 경기도는 법인중과세 합리화 방안, 제주도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배제 환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과세의 타당성 홍보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 지원, 관련 지자체간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회의원의 의원입법 발의 등에 대한 종합적 준비와 시행 필요

2) 독일은 2006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이용하여 독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가 크게 해소되었음

3)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특정장소의 입장행위와 특정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 주세, 농어촌특별세 중 지방세분 등의 지방세 이양이 제안되고 있음

3) 지방세정 발전방안

- 첫째, 충청남도 도민 중심의 납세지원단의 창설을 제안. 현재 상황에서 충청남도의 시·군세 체납액 감소는 세정발전의 핵심 과제
 - 성남시의 ‘체납실태 전수조사반’ 사례를 벤치마킹해 충청남도가 납세지원단을 창설.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합의해 창설하고, 시군의 도민을 중심으로 모집하되, 교육과 훈련, 관리는 도에서 운영할 수 있음
 - 도민의 입장에서 체납실태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도민 애로사항 반영, 복지사각지대 돌봄 세대 적극 발굴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둘째, 시·군과 도가 시·군세 체납액에 대한 공동대책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본부를 충청남도 도청에 두고 각 시·군으로부터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파견 받아 공동체납 징수팀을 구성
 -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체납징수에 소극적인 자치단체장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체납징수업무 수행 가능. 이해관계가 없는 시·군 공무원이 집행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가능

- 셋째, 공동대책팀 구성이 어려울 경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음.
 - 현재 충남도는 체납징수담당관 1인이 이를 수행하고 있고, 시·군에는 전담반이 별도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시·군과 도의 체납징수 공동대책팀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 별도 전담반을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시장과 군수가 부과한 도세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규정을 신설해 고액체납액을 도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도·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

- 예산지출에 대한 재정측면과 세수확보를 위한 세제측면, 그리고 효율적인 징수행정을 위한 세정측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충청남도 실정에 부합하는 ‘충남형’ 재정확충방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충청남도의 사례와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우선 재정측면에서 충청남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질화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의 활성화, 공개매체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당장 충청남도는 지방공기업의 개혁과 운영효율화, 자금관리방식의 개선 등을 앞서 시행해야 할 것임
- 세제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저장·정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노력을 충청남도가 적극 전개해야 함. 이미 관련 세제의 신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행정자치부 차원의 세법개정안 검토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신세도입에 대한 긍정적 여론형성을 위한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와 입법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정측면은 충청남도과 소속 시·군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이를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 충청남도 도민 중심의 납세지원단의 창설, 시·군과 도가 함께하는 시·군세 체납액 공동대책팀 구성, 고액체납자 체납징수전담반 구성 가운데 가능한 대책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충남형 재정확충 방안을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임

안 연 환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세법센터, ahntax@hanmail.net
02-785-2030

이하 교신저자 생략

※ 본 리포트는 2015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세제·세정 발전방안—충청남도를 중심으로」를 요약한 것임.

◆ 참고 자료 ◆

- 김태호(2015), “체납세금 징수증대를 위한 공매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김태호(2014), “지방세 관련법 체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서정섭(2012), “지방재정 위기 발생에 대한 진단과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국찬(2014),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4호.
- 유태현(2015), “지방세정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방세무직 운용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유태현(2013), “특정시설 입장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윤영진(2012),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서울.
- 윤영진·김경도(2012),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성 확보방안”, 사회과학논총 제31집 1호.
- 이동식(2015), “지방세원 확대를 위한 공동세제도 활용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영화·주만수·최병호·홍서빈(201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전동훈(2015), “지방세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하능식(2014), “미래지향적 지방세체계 구축방향”,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제2차 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
- 하능식·임상수·이선영(2014), “OECD 주요국의 조세체계 비교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 충청남도 세정과 내부자료(2015)
- 충청남도 지방세제개선연구팀 내부자료(2015)
- 국세청, “2015년 국세통계연보”, www.nts.go.kr(2015.12.31.)
- 재정고,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율(2013)”, lofin.moi.go.kr(2015.12.11.)
- 충청남도, “충남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 www.chungam.net(2015.12.11.)
- 행정자치부, “2014년 지방세통계연감”, www.mogaha.go.kr(2015.12.11.)

충남리포트(2015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삽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실태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아·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종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여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17
2015-30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홍성효	2015.07.23
2015-31	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	김양중	2015.07.31
2015-32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2015.08.12
2015-33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홍원표·강수현	2015.08.20
2015-34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	이관률·송두범	2015.08.27
2015-35	충남의 제조업 중요소생산성 분석	이준표	2015.09.03
2015-36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이원태·김영일	2015.09.10
2015-37	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정종관 외	2015.09.17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38	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	박경철	2015.09.22
2015-39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지훈	2015.10.08
2015-40	일본 후쿠오카현의 수소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5.10.13
2015-4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	임성규 · 정명채	2015.10.22
2015-42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맞춤형 농정혁신모델	김기현	2015.10.27
2015-43	‘도는 도답게’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권선희	2015.10.29
2015-44	충남 지방문화원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최영화	2015.11.05
2015-45	충남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현황과 도민 건강 정책 방안	임준홍 · 이경주	2015.11.12
2015-46	중국 관광객(요우커, 遊客)의 충남 유치 전략 마련	박인성	2015.11.16
2015-47	충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김성욱 · 최정석	2015.11.23
2015-48	적극적인 커뮤니티시설 도입을 통해 충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이상준	2015.11.27
2015-49	대체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의 정책 방안	김양중	2015.12.03
2015-50	충남 홍동 유기농업의 특징과 과제	김기흥	2015.12.10
2015-51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측정망, 충남 도내 확대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5.12.17
2015-52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강마야	2015.12.20
2015-53	금강의 미래, 금강비전으로 말하다	이상진 · 김영일	2015.12.30
2016-01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 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 패스पोर्ट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욱 외	2016.01.14
2016-04	금강 중·하류의 물 환경 특성과 큰빛이끼벌레 서식에 따른 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입지 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 지역경제 생산성의 특징과 정책 과제	이종윤 · 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상욱 · 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여형범	2016.02.24
2016-11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	윤정미	2016.03.03
2016-12	충남 상생산업단지 정책의 성공전략과 추진과제	장수명 외 2명	2016.03.10
2016-13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책지원 방안	김태연 외 2명	2016.03.17
2016-14	충남도 에너지 정제·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	이민정	2016.03.23
2016-15	충남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	홍원표	2016.03.30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